# 코로나19 방역에 피로 누적… 현역장병 '처우개선' 시급

**백신수송·선별진료소 등에 파견**
**"공무원·간호사보다 근무환경 열악**
**체력단련·휴식 시간 등 보장 안돼"**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활용 목소리**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육군 현장지원팀 군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지원에 나서는 현역 장병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이 현역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국가적 재해재난을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보고 예비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8일 복수의 현역 장병들은 군의 코로나19 방역지원에 대해 '시민에 대한 봉사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임무이지만, 평시작전이나 기타 임무와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軍 코로나19 방역지원, 파견장병 처우는 미비**

특전사 소속의 한 부사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수송 및 선별진료, 확진자 역학조사에 특전사 대원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들에 대한 파견근무지원은 타 정부부처 공무원이나 간호사보다 열악하다"고 말했다.

특전사의 경우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철도 파업'이 발생될 경우 철도운행에도 투입되는데 일별 약 2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원받는다. 그렇지만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원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받고 있다. 이마저도 47시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방역지원 파견처에서 추가근무를 더 요구할 경우 실제 근무 시간에 맞는 급여를 맞지 못한다.

특전사 소속의 한 지휘관은 "백신 수송 및 보건소 등 지역 관공서 파견이 부대훈련이나 특전사 대원의 전기전술 유지에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개월 간 파견되는 대원들의 경우 체력단련은 물론이고 개인휴식 여건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전사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백신저장소 경계근무지원 병력도 세탁을 비롯한 개인정비 및 휴식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군인으로서 유지해야 할 품위를 지키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보도되자 육군 관계자는 "백신 경계근무에 투입된 간부에게는 여비로 1일 2만원, 병은 식비로 1일 2만1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2000원의 증식비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도 38시간에서 47시간으로 확대해, 근무가 시작된 2월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일부터 백신저장소 경계근무자의 근무 형태도 2개조 12시간 교대근무를 6개조로 편성해 출퇴근 근무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방역지원 투입 고려해야**

코로나19 방역지원 장병들의 근무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정예 예비전력으로 평가받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을 투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전사와 수방사를 비롯한 지역방위 부대에서는 최소한의 '주말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소속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이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육군에서 최초 도입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하사이상 소령이하로 편성된 예비군이 연간 15일까지 각 지역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에서 복무하는 제도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올해부터 해군·해병대, 공군으로 확대돼 전국에 현재 3011명이 복무하고 있다. 이들은 평일 복무 10만원, 휴일 복무 15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 예비군이기도 하다. 이들의 급여는 이미 국방예산에 편성됐지만, 군 당국은 이들을 일반 예비군과 동일시 해 2년 간 소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관련예산은 여유가 있다. 추가예산의 부담이 크게 없는 셈이다.

더욱이 육군은 이들의 복무일을 30일까지 연장시킨 '확장형 직위자'를 올해부터 시험 복무시키기로 했지만, 8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2~3일 정도의 소집에 그쳤다.

복수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지원한 예비전력인 만큼, 군과 지역사회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군 당국이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급여 및 인사제도의 지원이 뛰어난 '즉응예비자위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 현역 자위관과 함께 즉응예비자위관을 투입했다. 프랑스는 2015년 파리 테러 당시, 치안유지 보조를 위해 지원예비군들을 투입하기도 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 '장기유급휴가 훈련' 부산·인천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훈련비·인건비 부담**
**자치단체서 사회보험료 50% 지원**

최소 한 달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통해 직무훈련을 하고, 전문성을 키워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이 부산과 인천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훈련기간 동안 사업주에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50%를 각각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시, 인천시 중구와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 훈련' 확대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인천과 함께 앞으로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 훈련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4주 이상 유급휴가 중 직무훈련을 하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훈련비와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경상남도와 시범사업을 했고, 지난해 836명, 올해 6173명이 훈련에 참여 중이다. 이후 부산과 인천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 훈련에 부산은 조선업과 전시·국제회의업 분야에서 실시한다. 인천은 기내식 제조 등 항공기 취급업 분야 기업이 참여한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추가로 신청하는 기업들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2021 서울안보대화' 진행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1 서울안보대화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위협과 군의 대응'을 주제로 특별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 수의사법 개정… 내년 첫 동물보건사 배출

**농식품부, 동물진료 서비스발전 도모**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년에 첫 동물보건사가 배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개정·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으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등을 공고토록 했고, 필기시험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로 정했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할 실습교육 이수시간은 120시간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9월~11월까지 실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업부

# 소부장닷넷 구축·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소부장 기업·기술, 신뢰성·양산성능평가, 통계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닷넷'을 구축하고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부장닷넷은 기존 '소재부품종합정보망(www.mctnet.org)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던 소부장 관련 제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종합포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소부장통계 개편으로 소부장 산업 동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자료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정부도 소부장 정책 추진, 소부장 업계 및 관련 학계 산업 동향 분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올 정부인증 사회적기업 3000개 돌파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3만여명**
**작년 매출 5조원 이상… 10% 늘어**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올해 3000곳을 넘어섰다. 전체 근로자 5만여명 중 절반이 넘는 3만여명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도 5조원 이상으로 전년대비 10% 가량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97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총 3064곳으로 늘어났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7년 55곳이었지만 2013년 1012곳, 2018년 2122곳, 그리고 올해 3000곳 이상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고용도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 근로자 5만5407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3만3206명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각각 202만8000원, 175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3.6% 상승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사회적기업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로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고용 안전망을 제공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사회적기업은 매출액도 늘면서 성장력도 갖춰다는 평가다.

지난해말 사회적기업 매출액은 5조2939억원으로 전년보다 9.9% 증가했다. 이 중 민간 매출액이 3조원이었다. 사회적기업의 평균 5년 생존율은 79.7%로 일반 기업(31.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세종=원승일 기자